

염주실내체육관내 잔디광장 파손 체육시설 수년 흉물 방치

사고 위험 주민들 원성 관리당국 예산 타령만

광주 염주실내체육관 내 잔디광장 체육시설이 수년 간 파손된 채 흉물로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서구 화정동 염주실내체육관 내 잔디광장(3천305.8㎡)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레저활동을 위해 뒷뜰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원형 철봉 등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등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각종 운동기구와 휴게시설 상당수가 파손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보수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길이 2m의 뒷뜰일으키기 나무 등받이는 고정되지 않은 채 지지대와 분리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특히 지름 2.5m의 원형 철봉은 지난해 10월 초까지 나무가 썩어 철거됐으나 아직까지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주민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잔디광장 인근 공공

화장실의 경우 화장지를 제때 비치하지 않아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 정모(31·서구 염주동)씨는 “매일 밤 가족들과 함께 잔디광장으로 운동을 하는데, 각종 운동기구가 고장 나 있어 이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다.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하다”며 “이용도 못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 체육시설만 설치해 두면 뭐하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시체육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수공사를 미루고 있고, 관할 구청인 서구청은 ‘관리주체가 아니다’며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광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관리 중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난감하다”며 “지난해 10월 초 광주체전을 앞두고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 두 차례 예산지원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조만간 시와 관할 구청 등과 협의해 보수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동 염주실내체육관 내 잔디광장에 설치된 뒷뜰 일으키기 운동기구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최헌배기자 choi@kwangju.co.kr

북구 26개 모든洞에 ‘작은 도서관’

전국 처음 설치 조례 만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시 북구내 26개 동(洞)마다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광주 북구의회는 25일 관내 모든 동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토록 한 홍인화 의원(민주·비례)의 조례안이 이날 열린 15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북구에 있는 26개 동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매주 5일 이상(주말 하루 포함) 운영하게 된다.

82㎡ 이상의 규모로 지어지는 작은 도서관에는 최소 15개의 열람석과 3천권 가량의 장서가 갖춰지며 해

마다 10% 이상의 신규 자료가 추가된다.

조례안은 현재 구가 시립 일곡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약자와 장애인이 찾아가기 쉽지는 않을 것인데, 동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했다.

북구는 현재 동립동과 운암동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데 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24개 도서관의 동시 건립이 어려울 경우 번두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을 방침이다.

홍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수시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교대 임현모 총장 사퇴

교육과학기술부 사직서 수리

정치활동 등으로 교수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광주교대 임현모 총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신임 총장 선출은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뒤 교직원 투표를 거쳐 다음달 하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학측은 또 총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선거 업무 대행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 전 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대선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맡는 등 정치활동을 활발히 펴 온데다 지난 3월에는 교내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동료 교수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차없는 시청’ 첫 날 광주시가 초고유가 극복을 위해 지정한 ‘차없는 시청’ 첫 날인 25일 광주시의회 옆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시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모든 직원과 청사 입주자들의 차량 진입을 통제, 대중 교통을 이용하도록 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위험한 축대... 쌓이는 쓰레기... 휴대폰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남구 민원 신속대응 시스템

앞으로는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민원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 남구청은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사진·동영상으로 전송하게 되면 처리해주는 ‘동영상 민원접수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민원접수시스템’은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한 구와 주민의 양방향 민원 서비스 처리 방식으로, 주민이 실시간으로 사진·동영상을 전송하면 담당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통

한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준다.

이에 주민들은 쓰레기 불법투기, 재난위험요소 등 불편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구청 생활민원과 휴대전화 번호(010-4006-0113)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총괄 담당자가 확인 후 해당부서에 전해지고, 실무자는 1차적으로 민원 접수 상황을 문자로 안내한 후 최종 처리 결과를 다시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남구청 통신팀 박병주 팀장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기름 아끼고 승객 기다림 줄이고 시내버스 첫차 중간 정류장 출발

광주시 18개 노선 배차

광주시는 시내버스 18개 노선의 중간 정류소에도 첫 차를 배차기로 했다. 초고유가속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조기 출근자 및 통학생을 위해 첫 차를 늘려 운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내버스 노선 기점과 종점에서만 출발하는 첫 차가 오는 7월 1일부터는 중간 정류소에서 양 방향으로 운행하게 된다.

이는 시가 지난 4월 13일부터 급행간선 4개 노선을 대상으로 중간 정류소에서 첫 차를 시범 운행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던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체 87개 노

선 가운데 주행 시간 70분 이상인 8개 간선노선의 중간 정류소에 첫 차를 추가 배치해 기점과 종점을 향해 운행기로 했다.

그동안 노선의 중간 지점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전 6시 이후에나 첫 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첫 차 이용시간이 30분 이상 빨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첫차 이용에 불편을 느껴온 조기 출근자와 통학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첫차 운행방식을 개선했다”며 “이는 첫 차 시간을 현행 오전 5시40분대로 유지하면서 이용시간은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복직법인 인가 물의 직위해제 市간부

복직이나 면직이나... 인사조치 관심

‘복직이나 직권 면직이나’ 광주시가 N복직법인 설립인가 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한 오모 전 담당 국장의 신분상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N복직법인 설립인가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K의원으로부 터 항응 접대를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K(49·5급)씨는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그동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온 오 전 국장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지난 3월 31일자로 직위해제돼 현재 총무과 대기 상태인 오 전 국장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인 이달 말까지 복직되지 않을 경우 자동면직될 수 있다는 점. 더욱이 오 국장은 지난해 명예퇴직한 뒤 2년 임기의 사회복지국장에 임명된 개방형 직위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청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한편

고문 변호사와 인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달 말까지 오 국장의 신분상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박광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건 송치 후 검찰의 판단도 관건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복직이나 직권 면직이나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휘 감독 등의 책임을 물을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 경우 직권 면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0215300-9999

1588-8400 / 010-722-0100

10215300-9999